



입법정책정보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목차

I. 법령	1
○ 문화예술진흥법	1
○ 국민체육진흥법	3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4
○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4
○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5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6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일부개정]

□ 제 · 개정이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조치 이행(원상회복 · 보수 · 철거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와 미술작품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 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 ·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 · 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관련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 제 · 개정이유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진행 중이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인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신 · 구조문대비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제18760호, 2022. 1. 18,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관련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

- 조례 제17조(운영비 지원)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를 정하고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그 밖에 체육회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 정비 필요함.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2. 3. 10.] [서울특별시조례 제8366호, 2022. 3. 10., 제정]

□ 제정이유

가. 1인 가구 증가 및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쇼핑과 식음료 배달 주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팩은 플라스틱 성분의 젤이 들어 있는 형태로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버려짐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다. 따라서 아이스팩 수거·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나.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유도 및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제6조).

다. 이행실태의 점검 및 사업 종료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제8조).

라.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 25.] [인천광역시조례 제6805호, 2022. 2. 24., 제정]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라.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마.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바.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 지방의회의원이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안전번호의견22-0064, 요청기관: 경상남도)

□ 주요내용

[의뢰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이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에서 안전의 심의 또는 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용을 예외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 가·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음.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이러한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보호의무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로서의 비밀엄수 의무나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 의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종류나 그 수준을 구별하여 특별히 비밀엄수 의무에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비밀이나 정보와 구별하여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비밀엄수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임(각주: 법제처 2010. 8. 23. 10-0197 해석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유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을 하는 행위가 곧바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비밀엄수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밀유지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이나 보호하려는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에서 일의적으로 “비밀유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도록 할 경우 관련 서류에 포함된 정보의 비밀유지 필요성과 무관하게 제한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자료출처: 법제처]